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213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4,851,7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369,6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184,820원(가산세 포함) 합계 84,406,1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30. 'B'(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동차부품, 금형, 연마, 가공을 종목으로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는 2019. 7. 10. ○○시 ○○구 C 공장용지 1,488㎡ 외 1필지(면적 합계 1,668.5㎡,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¹⁾, 이 사건 공장용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시장은 2021. 5. 7.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장 중 연면적 1,041㎡(이 사건 공장의 1층 연면적 1,131.05㎡ - 이 사건 공장의 2, 3층 연면적 90.05㎡)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1. 11. 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위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83,331,760 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21. 12.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1) 이 사건 공장의 도로명 주소는 ○○시 ○○구 E이다.



하였으나, ○○○도지사는 2022. 2. 10.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16. 원고에게 취득세 74,851,7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6,369,6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184,820원(가산세 포함) 합계 84,406,1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²⁾.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26, 36, 3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정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사장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정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사업체가 사업자등록

2) 조세심판원의 심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2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가 처분의 근거 조항임을 전제로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을 해지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주었다. 원고는 이러한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고, 창업일인 2017. 3. 30.로부터 4년 이내인 2019. 7.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5. 26. 이 사건 공장이 소재한 ○○시 ○○구 E을 본점으로,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 사항으로, 대표자를 사내이사 F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 이후인 2021. 5. 18. 본점 소재지를 ○○시 ○○구 G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위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20. 6. 3.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보증금을 8천 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25. 6. 2.까지로, 월 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관련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20. 6. 3.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소사장 계약(이하 '이 사건 소사장 계약'이라 하며, 관련 계약서를 '소사장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사장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가공의 정의 및 범위]

본 계약에서 임가공이라 함은 "갑"이 발주로 "을"이 생산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용된다.

제2조 [임가공 장소 및 생산설비]

임가공 장소는 "갑" 소유공장(○○구 E)에서 "갑"의 소유설비로 생산한다.

제6조 [원부재료 관리]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재료는 "을"이 자체조달한다.

제7조 [품질관리 및 납기준수]

1. 품질관리

1) 임가공에 대한 품질관리는 "을"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을"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임가공 납품 후 "을"의 원인에 의한 claim 발생 시 "을"은 재선별, 또는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치명결점: 책임변상)

4) 이 사건 법인은 2021. 1. 6. 원고에게 '소사장 계약에 따라 2020년도 순이익금에 따른 분배를 실시할 예정이고, 순이익에 대한 분배는 이 사건 법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배분할 것을 요청하며, 반기사업을 통한 배분으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상호간 최대한 협의할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이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2021. 1.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사장제도 이익분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정산금액 : 약 75,000,000원

대상기간 : 2020. 6. 1.

2021. 12. 31.

지급계약 변경사유 : 1.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2. 상호간 협의로 인한 지급조건 변경

3. 분배 관련 사항 등

2020년 5월 31일 계약한 소사장거래계약을 위와 같이 임의로 변경협의하기로 합의한다.



5) 이 사건 소사장계약에 따른 순이익금 배분을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이
2021. 1. 6. 기안한 품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목 : 2020년도 소사장제도에 따른 순이익금 분배
2. 업체 : D
3. 협의내용 : 1) 현금흐름과 유동성에 저해 받지 않는 범위
2) 유예기간 협의
3) 계약서 재협의 작성
4. 분배금액 : 약 75,000,000원
5. 최초지급액 : 30,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 28, 3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감면된 취득세 등 추징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
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제58조의
3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8조의3 제7항 제1호, 제2호). 이러한 규
정들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
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 활동 촉진 및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세제 감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세제 감면이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



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참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정한 감면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23, 32 내지 35, 38 내지 41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장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접 사용 여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직접 사용의 주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인사업체의 목적인 제조업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사업수행에 직



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제3자에 대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2) 원고는, 소사장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무효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 설비와 기계 장비를 원고가 직접 구매하거나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법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나 비용 처리를 원고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은 개인사업체와는 별개·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개인사업체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이후에 개인사업체의 매출은 금형, 자동차 부품 등이 아닌 고철로 인한 매출로 한정되었고, 그 매출액도 이 사건 법인의 설립 이전과 대비하여 약 4%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였다. 이 사건 법인 설립 이전의 개인사업체의 주된 매출처는 H 주식회사였는데,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에는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법인의 주된 매출처가 되었고, 개인사업체의 기존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 사건 법인의 매출액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법인은 매출처인 거래처들에게 물건을 직접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법인소득)를 직접 납부하였다. 피고는 2021. 5.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태조사 당시 이 사건 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입매출처 상세현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③ 소사장 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특정 사업 또는 공정의 책임을 맡은 자가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사내 하도급으로서, 소사장이 기업 내 일부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소사장의 주된 매출처는 해당 사업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공장 중 92.04%의 면적을 차지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전부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매출은 원고로부터 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상반기에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에 공급가액 79,000,000원의 거래 1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액 75,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명의로 독립적인 제조업 매출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따른 순이익금을 배분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정산금도 이 사건 법인의 현금흐름과 유동성에 저해 받지 않는 범위에서 반기별로 이 사건 법인과 협의를 거쳐 분배받기로 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사장 계약을 통해 직접 이 사건 법인의 제조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원고가 소사장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법인의 제조업을 개인사업체의 제조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³⁾, 이 사건 법인을 개인사업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법인이 형해화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⑤ 나아가 원고가 소사장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려면, 원고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소사장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통계청장 발간 한국표준산업분류 '1. 제조업의 정의' 참조), 소사장 계약서에 의하면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재료는 이 사건 법인이 자체 조달하고(제6조), 임가공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사건 법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이 사건 법인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7조).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제조업을 개인사업체의 제조업과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 이 사건 법인이 원고가 출원한 특허 기술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주된 거래처인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업체코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운영과 원고의 사업 운영이 일부 혼재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 뿐, 이 사건 법인을 개인사업체로 볼 수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완전한 지휘, 통제 및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1호가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

3) 한편, 피고의 2021. 5. 7. 출장(견문)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법인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예외사유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위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등 참조).

(2) 세금 감면에 관한 수혜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느 개인 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의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인정받아 세금 감면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전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을 취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 운영 방식, 경제성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내·외부적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 피고가 원고의 질의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질의에 대한 추상적인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판사 유○○

 판사 김○○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